

환경문제의 국제적 이해관계와 갈등

일 시 : 1998년 9월 24일(목) (오후 4시 - 5시 30분)

장 소 : 상지대학교 본관 408호 대학원 강의실

사 회 자 : 김인재(상지대 교수, 법학)

발 표 자 : 최종덕(상지대 교수, 철학)

토 론 자 : 조석곤(상지대 교수, 경제학)

<1> 서구에 있어서 과학은 서구의 정신과 세계관을 하나로 담아낸 중요한 양상이다. 서구에서 철학이 생긴 이후 정신의 의미가 합리성 혹은 이성으로 바뀌면서 세계관은 법칙의 영역 안으로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세계관이 다 그러하지만 서구의 세계관도 지리적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그 지리적 조건이란 단순히 지리풍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종족사와 신앙체계 그리고 경제적 조건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 지금이 되어버린 나중에 와서 종족사는 인종주의, 신앙체계는 기독교로 그리고 경제적 조건은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다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을 말할 때는 연역법칙이 지배하는 이론체계만 보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위의 세가지 조건을 같이 말해야 한다.

현대 환경위기와 관련하여 서구과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런데 실제로 서구 과학비판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 근대화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서구이성에 대한 비판이 함께 섞여있다. 환경위기 혹은 문명위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야기된 비판의 시각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세계관으로서 주객분리에 대한 것, 혹은 자연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비판이다. 과학에서는 기계론적 사유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형이상학에서는 결정론적 구조관에 대한 것이며, 방법론에서는 분석주의와 환원주의 혹은 연역적 사유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인간소외의 문제, 혹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생긴 환경파괴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과학이 지리적 역사적 조건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이라는 스펙트럼과 관련하여 과학과 사회의 관계성을 분광학적인 접근통로를 통하여 보는 것이다. 즉 과학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관계되거나, 과학에 대한 반항적 의식 등의 주변상황을 말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통로를 통해서 보려는 것은 그러한 비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함께 하면서도 그 비판 속에 숨어서 대세를 거스리지 않고 자신을 더 정교하게 존속시키려는 극우보수의 생태논리를 다시 비판하는 의도에 있다.

<2> 첫째 서구과학의 인식의 한계성에 대한 비판이다. 서구과학의 구조적 틀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현상과 존재계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 디자인(신) 개념에서 만들어졌다. 현상계는 존재계를 모방만 할 수 있지, 그와 결코 동일한 지위를 갖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의 창조물인 인간은 신의 의지를 전부 알 수 없다. 인간의 인식한계는 여기서 생긴다. 불완전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인식능력을 쓴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의 역할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서구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 혼자만의 지식을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은 전달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전달매체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했다. 그들은 인간인식의 한계를 검혀하게 이미 수용했으며 그 한계를 신과 인간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중언어로서 조금씩 넓혀가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이러한 반성없이 서구의 인식론의 한계만을 부각시켜 말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서구의 인식의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주역의 자연관이나 노장자를 말하거나 화엄경의 일체사상만을 자꾸 반복하면 자칫 뜬 구름잡는 이야기로 전락될 수 있다.

둘째 서구 기계론이나 결정론에 대한 비판이다. 기계론이나 결정론이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반성없는 생기론이나 정령론으로 잘못 빠지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이성비판
↓ Postmodernism.
이성타락
이성불능, 이성미약
반이성
중립적비판

문제라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이나 뉴턴의 기계론은 환경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초로 끼는 비판대상이었다. 그들의 이원론이나 기계론은 확실히 산업혁명의 기초사유였으며, 그로부터 야기된 반환경적 요인은 문명사적으로 심각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기계론이나 결정론은 과학에서 인과율로 나타난다. 인과율은 물리화학적 사건이나 사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대한 이차기술 체계의 도구이다. 즉 자연 자체가 인과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진술과 자연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다르다. 서구의 인과적 과학체계가 형이상학적 결정론과 세계관의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후자의 진술을 전자의 진술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문제는 기계론과 결정론과 같은 개념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더 크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되는 현상이라든지, 영주와 농노 혹은 자본주와 노동자 사이의 빈부 격차에서 오는 새로운 계급화 현상이 결정론적인 신분분리로서 대치되는 사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결정론에 대한 반감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감은 60년대 이후 뉴턴역학의 세계관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곧장 반대급부적인 주술적 생기론이나 현대적 정령론(animism)이 부활되었다. 생기론이나 정령론은 기계론의 병리적 현상들을 지적해내기는 했지만 그것에 지나쳐 사회최면제적 역할을 수반하였다. 그것은 비율(ratio)로서 상징되는 기계의 이성주의에 반하여, 그 이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도피하는 안식처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반기계론적 추세는 과학 단독의 문제영역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학적 분석이 함께 따라야 한다.

세째 분석주의와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과학일반의 조류는 과거 물리학주의가 과학을 지배했던 것과 달리 생물학주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데카르트적인 생물학이 아니라 생물학이 물리학 방법론과 다른 생물학 고유영역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분명히 기존의 분석주의와 환원주의 방법론으로는 생명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의 한계가 지적되고,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도높은 용도폐기론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강한 비난은 전일론(holism)의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전일론에 대한 평가가 아전인수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과학에서 말하는 전일론의 실체를 알아야만 한다. 그들의 전일론은 분석주의 혹은 환원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고에너지 물리학이나 생명과학으로의 과학적 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인식론적(고전적) 환원주의가 갖는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존재의 양상을 올바르게 기술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으며, 그 새로운 도구가 마치 일반인들에게는 환원주의 파괴의 방법론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해수준에서 전일론을 받아들인다면 과학과 형이상학은 방법론에서 조차 구분이 안된다. 과학과 형이상학은 존재론의 차원에서 서로 만나고 있고 또 만나야 하지만 일선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언어 매체를 통한 기술학(descriptive science)이다. 간단히 말해서 첨단유전공학 연구의 성과기준은 여전히 환원적 연구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3〉 위의 세가지 문제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그렇게 잘못 이해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면 사회적 접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말하는 외눈박이 시야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회와의 연계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은 실천의 문제와 동떨어져서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의 현실과 과학의 희망을 분명하게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과학의 유토

피아가 현실의 과학을 지배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서구의 유토피아론은 근대 과학혁명의 사상적 정초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지금 조금만 참으면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전략될 위험성이 짙다. 그 '지금'을 항상 지금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과거 전제주의의 전략이었으며 오늘날도 상업자본주의 밑에 깔린 생각들이다. 실제로 현재도 많은 천민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려는 개도국의 발전모델과 연관되고 있다.

환경개량주의의 한 갈래인 과학지상주의 혹은 부드럽게 말해서 과학개선주의가 잘못된 유토피아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해서 과학주의가 아니라 산업기술주의라고 해야 한다. 구체적인 작은 보기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하여 청정기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의 요청이 상업주의의 일환으로 전략될 위험성이 많음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CFCs 금지협약에 따른 국제시장 독점을 위한 전술을 상기하면 된다. 미국은 그들의 대체물질 개발 속도에 맞추어 협약 시행 시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그 개발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국가들은 전부 CFCs에 관련한 시장종속이 되고 만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 한다.

세계 앞에서 말한 주술화된 생기론이나 현대화된 정령론이다. 나는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인간 소외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왜냐하면 들 다 고도화된 산업화에 따른 필연적 산업사회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신흥 부흥종교, 밀교적 신비주의 집단, 기공에 대한 급속한 관심확대, 서구에서 동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동양에서 동양에 대한 허무한 자부심, 개인주의와 탈정치화가 가져 온 개인 서정주의의 확산 등이 바로 그 모순의 단편들이다.

고도의 산업화에 대한 분석을 단지 서구 합리성 혹은 이성주의의 물질적 소산물로서만 보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산업사회의 탈정치성을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라는 표현 혹은 효율과 극단적 합리성의 사회를 표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장 비합리적 요소인 주술성이나 신비주의가 자취를 감춰야 했다. 그러나 실제 사회현상에서는 주술성과 신비주의가 뒤끓고 있다. 오히려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화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최첨단의 과학과 최고의 비합리성인 신비주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신비주의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 보다는 결국 상업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략되가는 신비주의 산업이 문제인 것이다. 신비주의 산업 일반은 대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지만 결국 사회마취제적 기능에 봉사하고 만다. 신비주의산업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이익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호일 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보신주의로 전략된 생명주의 등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얼마나 깎아먹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생명주의는 결국 자기 개인만을 위한 보신주의일 뿐이다. 그것이 설령 종교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정신적 위안일 뿐이다. 또한 그 현상은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우 보수논리를 합리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도구로 전략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필리핀의 3S 책술은 사회참여를 막는 위정자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논리가 잘못 사용되어 치국평천하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수신제가만을 강조하는 단계적 전제주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된다.

환경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사회구조적 시각을 막고 개인의 환경의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지하철, 공원과 길거리는 깨끗해질지언즉 기업의 일회용 포장지는 더 늘고 화학적 제품이 늘 것이며, 지금의 검측기 갖고 잘 측정 안되는 다이옥신은 소각로 굴뚝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이며, 원자력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라는 공보처의 홍보가 결국은 승리하여 여기저기 핵발전소와 핵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님비현상을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라고 계속 밀어 붙이면서 결국은 행정편의주의로 가거나, 시행주 즉 기업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전지구적으로는 폐기물 이동금지협약은 유명무실해져서 국가간 기술이전과 경제원조라는 명목이 붙어 힘의 논리 혹은 경제논리가 우선

한 특정폐기물의 보이지 않는 이동이 더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영국과 미국 사이 독일과 영국 사이에서 사기업간의 핵폐기물이 이동되고 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폐기물 이동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넷째 민족주의의 창궐이다. 이 문제는 물론 과학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역사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를 통해서 말하려는 원래 생각은 인종주의 혹은 국수주의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쁜 인상을 준 것이 아니었다.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외세에 대한 방어외식 즉 애국심하고 통하는 것이었지만,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곧 제국주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세계질서 구조는 결국 민족주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 혹은 민족 사이의 전쟁횟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양적 측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WTO는 다자간 협상체계라는 구실로 시장 단일화와, 시장경제기준을 몇몇 힘있는 선진국에 맞출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것을 일찌기 눈치챈 프랑스는 강국의 신화를 재현하기 위하여 그 많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핵실험의 놀이를 감행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한 구석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열심히 해야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강국논리에만 신경을 뺏겨서는 안된다.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2000 번 이상의 핵실험에서 프랑스는 1할 정도이지만 미국은 1000여번이 훨씬 넘는 반 이상의 핵실험을 이미 했다는 점을 다시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과거 소련이 태평양에 갖다버린 핵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CO₂ 사용규제 협약에 적극 반대하는 중국의 속셈은 원칙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과거 서구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던 화석원료 찌꺼기의 피해를 중국이 왜 떠받아야 하느냐는 중국의 반박논리에 서구가 적절히 대응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¹⁾ 지역 생존논리와 전지구적 생존논리인 환경주의가 여전히 모순임을 알게 된다.

<4> 오늘날 국제관계에서의 힘의논리는 새로운 양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조화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국내적으로는 격동의 80년대가 지나고 온화한 90년대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적인 상황이 바뀐 것은 무엇인지 다시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약삭빠른 정세의 흐름은 자본패권주의와 그 아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은 마이클 조단의 덩크슛과 판단문맹의 사이비문화와 보신주의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

WHO이후 환경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OECD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본논리에 있으며 환경은 당위와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제일 급선무이지만 그 환경의 범위는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 국한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소위 환경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이 정말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들춰보아야 한다.

1) 지구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면서 선진 강국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오늘에 이식시키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가 차원의 제국주의는 물론 아니다. 제국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한 자본주의의 수행자인 서구의 초기업과 국제 폐기물 중개인들의 생존논리는 결국 개도국의 굴욕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952년 영국의 스모그 대참사 이후 환경문제는 국내외적, 즉 전지구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하여간 국제폐기물 상인의 입지는 매우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86년에는 폐기물 수입금지 국가의 수가 세 나라였던 것이 이제는 103개 나라로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폐기물 수출이 여전히 존

1) Co₂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러므로 30년 전 60-70년대 서구 산업사회의 원동력인 화석연료의 찌꺼기로 생긴 Co₂가 오늘의 전지구적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의 수입국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생긴다. 즉 그 수입국의 대부분은 개도국인 아시아가 떠맡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에도 아시아 유해폐기물 수입량이 1천4백만톤 이상이 된다.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대만 그리고 한국 등으로 납폐기물에서 금속스크랩, 의료폐기물 그리고 핵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선적해왔으며 지금도 그것을 음모 중이다. 유해폐기물 이동금지협약인 바젤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그것을 피해가는 일은 아주 쉽다. 영국이나 미국 등은 유해폐기물 이동금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기업수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다 못해 장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산화폐건전지는 건전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유해금속 쓰레기는 비료의 꼬리표를 달고 선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 국제 해운업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럽연합의 폐기물 이동금지법에 자동가입된 독일도 요즘 경제적으로 약소국이 된 영국 지방정부에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고준위)핵폐기물까지 영국에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BNFL사와 미국의 에너지청 사이의 계약은 환경과 국가 이익 사이의 허구적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실례다. 영국이 아니라 OECD국가가 힘없는 티베트와 인도에 선적하는 양은 더 많은 실정이다. 한국의 산하를 미국과 일본의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음모도 많았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그의 성공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했다. 박정권은 일본의 산업폐기물을 수입하면서 그 대가로 많은 기술원조를 받았다. 그뿐 아니라 고무산업과 섬유염료 산업을 공장플랜트 채로 받아 왔다. 박정희는 정말로 우리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무산업을 통해서 한때는 전세계 운동화 생산량의 85%를 부산지구에서 만들어 내었고, 대구지역의 섬유염색 산업을 통해서 세계의 의류시장을 강타하면서 한국의 경제를 도약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 그 말많은 영호남의 개발편주의 문제를 굳이 들고 나올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댓가로 영남의 낙동강은 이미 죽은 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산업은 대표적인 공해산업으로서 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이 기피하면서 제3세계에 원조 형식으로 해오한 플랜트 수출의 결과이다. 그러한 피해를 구미섬유 공단에 의한 낙동강 오염으로 우리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작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산업폐기물들이 지금도 우리 산하 어느 계곡, 어느 강물 깊숙이 버려졌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 산업폐기물 말고 다른 실례를 들어보자. 우리는 간혹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소위 신물질이라는 신약 투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은 선진국의 의료원조라는 명목으로 서구 제약회사의 약을 원조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 이 대부분은 서구 제약회사에서 발견한 신물질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약품을 만든 후 개도국의 병원을 통해서 1-3년 동안 임상실험을 거친 후 안정성 평가가 나아만 비로소 자국의 병원에서 자원의 국민들을 위해 쓴다. 유명한 식품회사인 밀루파에서도 행하는 개도국에 대한 분유 원조도 거의 그런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외에 몬트리얼 의정서에 나타나는 CFCs물질 사용규제와 고나련하여 보자. CFCs중간 대체물질을 일차적으로 1997년까지 찾아내지 못하는 나라들은 CFCs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자칫하면 선진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원래 미국은 c1-기가 하나도 없는 완전 대체물질을 제외한 모든 중간 대체 물질의 냉매제 사용을 2010년부터 금지시키려고 계획했었다. 그러다가 미국 기업들의 개발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져서 완전대체물질의 상용이 금세기 내에 가능할 것 같이 판단되자 미국의 의사대로 시행시점을 2010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겨 놓았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s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환경의 당위적 요청이지만 문제는 환경을 빙자한 미국 자본의 논리가 개도국을 족쇄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위와같은 국제사회적 문제해결 없이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환상에 지나

지 않는다. 그래서 서구강국의 경제제국주의 논리를 살피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3) 1991년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인 로렌스 섬머의 말이다. “나는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에 유해폐기물을 버리는 경제이론에 대한 비난에 어떻게든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OECD국가들은 그들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싼값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수출을 중요한 환경전략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친환경적 분위기고 말미암아 그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노골적, 직접적으로 실천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자국내의 기업이나 국제 중개상을 통해서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우리는 곧 자연의 나라, 친환경적인 나라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프랑스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매우 환경의식이 높은 나라라고 일반대중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자국내의 환경의식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환경법은 치밀하고 강도가 높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환경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환경정책도 고강수를 쓰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들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차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의 환경 장관은 7년 내로 시드니의 산업쓰레기 매립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폐기물 관리 녹색보고서, 1992) 그러면 그 산업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인가? 호주가 유해폐기물 수출국으로 악명높은 6개국의 선도국중 하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UNEP의 199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4백만 톤 가량의 유해폐기물 중에서 98%가 OECD 24개국에서 배출하는 양이라고 한다. 미국의 유해폐기물 매립비용은 1980년 16\$/t에서 1989년 250\$/t로 증가했다. 독일의 유해폐기물 소각비용도 1200마르크/t에서 11,000 마르크/t로 매우 크게 올랐다. 따라서 그들은 높은 비용을 대가로 하고 있다. 자국내의 환경법 강화로 인한 이런 비용증가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사활이 폐기물을 수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앞서도 말했듯이 바젤협약 이후에도 폐기물 수출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론 바젤협약에 정면에서 도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활용이라는 구실로 그것들은 동구권 국가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개도국으로 선적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대체적으로 바젤협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업들은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환경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업회의소 소장 이안 스파아서가 “유해폐기물 수출이 오스트레일리아에게 실질적인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이기주의는 현존한다.

캐나다도 유명하다. 캐나다도 유해폐기물을 다른 나라처럼 재활용이라는 구실아래 93년만 해도 16만3천톤 이상을 아시아 8개국으로 수출하였다. 독일은 국내법상 환경법령의 규제가 가장 심하기로 이름났지만 폐기물 수출법령은 가장 느슨하기로 유명하다. 영국은 덴마크의 수출금지 법령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한술 더 떠서 국회적인 차원에서 자국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다.

4) 각종의 국제환경규약이나 협약 등의 국제적 다자간 협약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역조치에 대한 환경평가와 환경조치에 대한 무역조건 평가가 상호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쩌면 아예 타협이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타협을 가장한 강요와 국복의 상호성일 수도 있다.

환경라운드에는 남북문제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적 경향등이 보태어져 간단하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전망이 어두운 원인은 선진국들이 환경과 무역의 조화라는 말을 내세울 뿐 환경을 빙자하여 오로지 장사속만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 무역규제의 실체인 미국 무역정책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차대전

이제 세계는 공민 의의 두 번 20년 → 중요) 1970년대
 이 우리 문제를 외부에만 돌린다.

이후 유지되어온 GATT 체제를 대체하는 WTO의 핵심기조는 자유무역을 규제무역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제무역의 기준들은 공정성의 개념이다. 공정성의 개념을 통해서 환경, 노동, 기술, 경쟁, 일반무역의 부문을 보자는 것이다. 공정성의 기준에 따른 독점금지법은 미국에서 단연 발전되어 있는데, 독점금지법이 실행되는 미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국제규약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논리는 최소한 외면상으로 강한 정의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실제로 미국이 그동안 다자간 국제게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을 갖는 나라들을 일괄적으로, 그것도 자기나라 조건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적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기준강화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국제시장성 약화의 부담을 개도국에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고 거시적 의미의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국경제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현재의 세계에서 환경과 관련된 신중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대두를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별다른 저지없이 계속 진전된다면 그것은 산업적으로 뒤떨어진 후진국들은 다시 한번 식민주의의 울가미에 걸어놓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 공업지역과 여타 비공업지역의 경계선은 이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냉엄한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능동적 사회과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원천을 서양적 개념에만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의 동서와 남북갈등을 조장한 무수한 자유주의 신봉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군사독재가 종식됨으로써 우리를 지금까지 억압해 왔던 문제들이 소멸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는 않다. 잠복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실현은 역사를 마음 속에 담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역사의 식민주의를 벗어나 자립성을 성취하느냐의 문제이다. 서구의 관념론과 사물에 빠진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카리스마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의 역사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대부분 서양전래의 방법론으로 서양의 학문을 하면서 내가 왜 서양의 역사에 종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반성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도 없었다. 이제는 하나하나 되짚어 보아야 할 때다.

신중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
 군사독재
 자립성

공민 의의 두 번
 중요)
 1970년대
 이 우리 문제를 외부에만 돌린다.
 이자본의 세계화
 이 대응하는 의미에서
 세계화
 이 경제를 늘려
 미국은 제1
 태? (국민 반대)
 이 경제 = 경제비
 이런
 동태로 부강됨.

1. 현행의 북방원칙, 신중 제국주의 발생원인? / 유럽의 리 / 유럽의 리.
 중국이 미국의 GNP 2개는 어떤?
2. 지동지정론은 어떤?
3. 지동지정론의 / 사회주의의 → 현행제도의 리의 문제가 2개 어떤?
4. 2개 리의 태안은? → 사회주의의 태안 현행제도의 리 원인.
5.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 → 사회주의 / 사회
6. 현행의 북방 → 현행제도의 리의 태안
7. 사회 → 사회

